



# 月間建築情報

79. 11. 21～12. 20

## 觀光호텔 서울에 100개, 5万客室신축

올림픽 유치계획따라, 87년까지 단계적으로

서울시는 오는 88년도 제24회 올림픽 경기 유치계획에 따라 選手村 및 觀光客宿泊施設로 사용하기 위해 서울市 内에 100개의 호텔을 건립할 계획이다. 서울시의 이같은 호텔건립계획은 현재 시내 55개 觀光호텔에 있는 客室 10,700室로서는 15,000~20,000명밖에 수용할수 없어 올림픽大会期間中 일시에 몰릴 10万名内外의 선수 및 관광객 숙소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서울시는 최소한 50,000개의 客室을 확보하기 위해 오는 81~87년 사이에 민간자본을 동원, 觀光호텔 100개를 건설하기로 하고, 81~82년 사이에 우선 20개호텔 (객실수 10,000)을 건립하고, 83~84년 사이에 30개호텔 (객실수 15,000), 85~87년 사이에 50개호텔 (객실수 25,000)을 각각 건립키로 했다.

觀光호텔 建立場地는 江東区 및 江南区의 区劃 整理地区中 都市計劃을 유보해 놓은 빈 땅이나 漢江辺으로 잡고 있다.

서울시는 호텔建立 候補地로 잡고 있는 漱江辺과 江南의 都市計劃 유보지 가운데 실제로 호텔을 건립할 수 있는 토지가 부족할 것으로 보고 漱江辺 高水敷地의 활용계획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 아파트地区의 1,000평미만 자투리땅

宅地로 許容 方針－서울시

정부는 서울의 宅地難을 해소하기 위해 당초 아파트地区로 지정되었으나 이미 아파트를 건축하고 남아 또다른 아파트를 건축할 수 없는 자투리땅들을 주택지로 이용할 수 있도록 용도지정을 해제할 방침이다.

11월23일 건설부에 의하면 지난 76년부터 서울시가 아파트地区로 지정한 토지는 모두 385만평으로 이중 80%인 300만평은 아파트를 건설하고, 85만평이 남아있는데, 이중 39만평은 아파트를 건설할 수 없는 자투리땅이거나 구릉지대인 것으로 밝혀졌다.

건설부는 이 땅들의 규모가 아파트를 건설할 수 없는 1,000평이하의 땅들이면서도 아파트地区의 용도 지정에 묶여 다른 용도로 이용할 수 없는 실정을 감안 용도지정을 해제하고 住宅地로 활용케할 방침이다.

## 80년, 住宅標準設計図 70종 普及

組立式 注文生産制度 신설－건설부

11월26일 건설부에 의하면, 지역별로 고유한 建築樣式 및 構造등의 특성을 살린 40종의 都市型 単独住宅 標準

設計図를 새로 作成, 보급키로 하는 외에 80년 취락구조 개선사업에 활용할 수 있는 30여종의 農村住宅 標準設計図를 작성, 보급키로 하고 있다.

農村住宅 標準設計図의 경우, 이미 각道知事が 인정 신청한 것만도 24종에 달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건설부가 창문등 규격화된 부자재를 사용토록 하는 등, 보완 수정하여 표준설계도로 정하고 이밖에 건설부에서 6종을 추가, 모두 30여종의 農村型 標準設計図를 보급할 방침이다.

이밖에 組立式住宅의 生산업체로부터도 설계도를 제출 받아 인정기준에 적합한 것은 이를 標準設計図로 정하고, 수요자의 주문에 응하여 組立式住宅 생산자가 시공해 주는 주택의 주문생산제도도 신설 활용키로 하고 있다.

### 塗料, 事前検査品目으로—工振厅

非規格 低質品 유통방지

11월28일 工業振興厅은 저질품이 범람하고 있는 塗料를 事前検査品目으로 지정, 품질향상을 기할 방침이다.

페인트協同組合에 가입한 塗料業者は 44개社로, 이중 KS 표시허가업체가 21社, 一般社가 23社이며, 신고된 非組合員社가 15社인데 기타 음성적 군소영세 업체가 상당수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KS표시상품이 전체 유통량의 5%에 불과하고, 非KS 허가업체 제품이 35%에 달하고 있는데 가격 면에서도 外部用 水性페인트의 경우 통당 최고 950원 최저 280원, 調合페인트(백색)는 최고 1,780원 최저 640원으로 엄청난 가격차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군소 영세업체에서 쏟아져 나오는 非規格 低質商品의 덤핑에 의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工振厅은 이 현실을 감안, 水性페인트(내부 및 외부용) 슬레이트 및 기와용페인트·調合페인트(백색 및 담색)·크롬산아연방청페인트·광면단 크롬산 아연방청페인트·바니쉬·에나멜·락카등 塗料를 事前検査品目으로 지정하고, 포장단위를 1, 4, 18ℓ로 하며 용기에는 품명·색상·부피·제조년월일 및 로트번호와 제조자명 또는 약호를 표시케할 계획이다.

### 工業開発奨励地区 10개地区 추가지정

国土 均衡開発·都市人口集中 방지  
無公害 中小企業 유타—건설부

11월28일 건설부에 의하면, 이날 지정된 地方工業開発奨励地区의 추가지정은 국토의 균형적 발전과 대도시에로의 工業 및 人口의 집중을 방지하고 大都市 整備를 촉진하기 위해 中小企業型 無公害性 工場用地 수요에 대처하기 위한 것이다.

地方工業開発奨励地区는 이미 清州를 비롯한 14개地区 11,256,000평에 지정하고 있으며, 이중 清州·光州·裡里·晋州·群山·論山地区는 현재 공업지구가 조성 중에 있으며 이밖에 8개地区는 공장의 입주가 완료되었다. 이에 따라 이번에 추가지정된 10개地区를 합하면 地方工業開発奨励地区는 모두 24개地区에 16,336,000평에 이르게 된다.

건설부는 앞으로도 조건이 좋고 우량농지 침식을 최소화할 수 있는 丘陵地의 활용이 가능한 지역에 대해서는 工團을 지정 地方工業開発奨励地区를 늘려나갈 방침이다.

그런데 이같은 개발계획에 따라 대상지역에 대한 부동산투기의 징조가 보이는 지역에 대해서는 이를 방지하기 위해 즉각 필요한 조치를 취하기로 하고 있다.

이날 새로 지정된 地方工業開発奨励地区·位置·面積(万坪)·유치업체·공장수는 다음과 같다.

○漆西地区: 경남 咸安군 漆西면 110만평, 기계·전자·직물, 200공장

○鄉南地区: 경기 華城군 鄉南면 20만평, 제약, 40공장

○文幕地区: 강원 橫城군 文幕군 30만평, 자동차부품·전자·봉재

○忠州地区: 충북 忠州市 45만평, 기계·전자·직물·약 50공장

○提川地区: 충북 提川군 提川읍 12만평, 기계·전자·직물·지물, 35공장

○天原地区: 충남 天原군 修身면 45만평, 기계·전자·비철금속, 190공장

○倭館地区: 경북 漆谷군 倭館읍 76만평, 기계·직물·연사, 267공장

○金泉地区: 경북 金陵군 開寧면 40만평, 농기계·전자·식품, 49공장

○泗川地区: 경남 泗川군 龍見면 90만평, 기계·전자·직물

### 大学 施設 아직도 크게 不足

校舍 40% 기준 미달—문교부

전국 国公私立 大学(校)의 교육시설이 기준에 비해, 校舍는 평균 40%, 체육장(운동장 포함)은 24%, 교지는 30%나 각각 부족한 것으로 밝혀졌다.

11월29일 文教部에 따르면 9월30일 현재 국공립 대학(교)의 校舍保有面積은 205,204평으로 시설기준에 비해 54%부족하고, 私立大 校舍保有面積은 692,993평으로 기준에 비해 33% 부족이 밝혀졌다.

### 落札二元制度 改善 검토—조달청

덤핑방지, 예정가의 80%이하는 무효화

調達厅은 현행 施設工事契約制度上 문제점으로 지적되

고 있는 그룹制限群再編成 및 落札=元化制度를 대폭 개선, 80년부터 시행할 것을 검토중이다.

11월30일 조달청은 신뢰받는 계약위임기관으로서의 성실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현행 그룹제한群을 조정, 1群을 20~30社로 편성하는 것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조달청은 무모한 덤핑落札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예정가격의 80%이하는 무효화하는 落札=元制度를 검토중인데 이는 제값받고 성실 시공하는 풍토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조치이다.

### 商業用 建築 活氣—10月中

15都市서 住居·工業用은 不振

12월 1 일, 건설부에 의하면 지난 10월중 전국 15개 주요도시의 住居用 建築許可面積은 67.9만m<sup>2</sup>로 前年 同期実績 113.3만m<sup>2</sup>의 59.9%、工業用 建築許可面積은 15.7만m<sup>2</sup>로 전년동기실적 24.8만m<sup>2</sup>의 63.3%를 나타내, 여전히 不振한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商業用建築許可面積은 59.2만m<sup>2</sup>로서 전년동기 실적 6.1만m<sup>2</sup>에 비해 무려 970.1%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建築制限措置가 시행되기 전인 지난 77년 10월에 비해서도 48%가 증가한 것이다.

이와같이 商業用建築活動이 활기를 띠고 있는 것은 지난 8월, 9월의 2 차례 결친 建築許可制限 措置의 해제 때문인 것으로 풀이되고 있는 특히 지난 11월 15일 전축 규제조치가 全面解除됨에 따라 앞으로 이같은 추세는 더욱 고조될 것으로 보인다.

### 市内バス 始終点 설치규제 완화

住居·綠地地域에도 가능—서울시

서울시는 12월 1 일 지금까지 商業地域과 準住居地域에만 市内バス 始終点을 설치토록 규정한 都市計劃 施設에 관한 規則을 일부 개정해, 앞으로는 住居地域과 自然綠地地域에도 始終点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市内バス会社는 生產綠地地域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 始終点을 이전하거나 신설할 수 있게 되었다.

### 核都市 연결하는 多核均衡開発의 단계

大韓國土開創学会 研究報告

12월 3 일, 大韓國土計測学会의 “韓國 都市의 機能形態 및 構造에 관한 研究”에 따르면 72년부터 10년동안 國土開創計測을 전국을 4大圈 8中圈 17小圈으로 나누어 각 권별로 中小都市를 선정하여 집중 육성시켜 주변 지역과의 균형적인 발전을 촉진하고 지역간 소득격차 해소·인

구분산을 시도하였으나 各圈域 中心都市의 뚜렷한 격차로 地方都市의 成長은 물론 지역균등 개발속도가 늦어지고 있다고 하였다.

따라서 農業과 工業分門파의 連繫性 결여로 거점개발이 당초 의도했던 지역적 격차를 해소시키지 못하고 있음을 감안, 中小都市가 地域의 核으로 육성될 수 있도록 格子型開發網의 형성과 뉴타운건설, 대규모 프로젝트를 통해 새로운 核都市 조성의 필요성이 있다.

또 이같은 核都市를 연결하는 그물형의 多核均衡開發이 이루어져야 할 단계가 왔다고 지적하고, 農村地域에도 農村都市를 배치, 多核網形成에 일익을 담당시켜 地域均等開發의 촉진제로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였다.

이 연구는 多核均等開發의 추진과 병행 政策·制度·法制上의 새로운 대책을 열거하고 있는데, 制度面에서는 土地鑑定 評価業務의 一元化, 地價上昇 投機性去來통제, 地價告示, 都市計劃事業 대상지역의 先買業務 등을 들고 있다.

### 国民休養地 開發 확충—교통부

80년대 대량觀光대비, 青少年 利用 施設도

12월 3 일, 交通部에 따르면 80년도 国民休養地開發 모델을 설정하고 수도권지역에 1개소의 示範 国民休養地 개발에 착수하는 한편, 오는 86년까지는 전국에 国民休養地 8개소를 추가 건설할 방침이다.

또 青少年을 위한 利用施設로 野營場 16개소, 野外學習場과 운동장시설 각 8개소 유스호스텔 800室을 건설하여 저소득층 및 군로자를 위해 저렴한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는 国民宿舎 16동과 休養地 4개소도 함께 개발할 예정이다.

### 工團등에 5개病院 신설—보사부

5개 市道立病院 개축 30개 保健支所 신축.

12월 3 일 保社部에 의하면 1980년중 17.8億원을 들여 原州·安東·瑞山·金泉지역의 市道立病院 시설 및 장비를 현대화하여 개축하고, 30개 지역에 保健支所를 신축 할 계획이다.

또 工業團地 및 医療 취약지역의 의료기반화충을 위해 14億원을 5개 病院을 신설하는 한편, 이를 취약 지역에 재벌 기업들의 民間地域病院을 유치하기 위해 7.1億원을 지원키로 했다.

### 集団宅地 開發할 土地—土開公조사

전국에 겨우 1億10万坪

전국의 都市計劃区域안에서 3,000평구모이상의 土地가

운데 集團宅地로 개발 가능한 토지는 1억10만평에 그쳐 주택을 건축할 수 있는 토지가 크게 부족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러한 사실은 韓國土地開發公社가 지난 6월20일부터 5개월동안 1,752명의 土地調查要員을 동원, 전국 36개 市와 市昇格 予定地인 慶南 昌原·忠北 提川·慶南 茉原 江原 墨湖·北坪 등 모두 40개 도시 387개 지역을 대상으로 실시한 宅地現況調査에서 12월 4일 밝혀진 것이다.

集團宅地로 개발 가능한 1억10만5천평은 남한 전체면적 298억평의 0.33%에 불과하다.

이 조사에 따르면 택지개발 가능 지역 가운데 住居 地域 안에서는 5,525만평, 綠地地域 안에서는 4,485만평이 개발 가능한 것으로 밝혀졌고, 40개 도시의 주택 부족율은 37.9%로 집계되었다.

이 조사는 특히 住居地域 안에서의 대단위 택지 개발이 어려운 때문에, 주거지역 미개발 토지의 활용, 구릉지·저습지 등 미개발 토지의 개발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했다.

### 그린벨트 建築規制 완화

#### 絕對面積 축소는 안해—건설부

12월 8일 전설부는 현행 그린벨트의 지역과 면적은 그대로 존속시키고, 반면에 그린벨트내 주민들의 불편을 덜고 생업과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지 않기 위해 그린벨트 내 관리규정을 현실에 맞도록 다소 완화, 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번의 완화조치는 지난 3월15일부터 5월말까지 78일간 전설·내무·국방 3부 합동으로 전국 그린벨트 실태조사와 지방자치단체 견의 및 그린벨트내 주민들의 진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불합리한 점만 개선한 것이다.

건설부가 개정한 그린벨트내 관리규정 완화 내용을 부분별로 보면 다음과 같다.

#### ▲住宅

① 부속건물 완화…종래 주택의 부속건물(창고등)은 반드시 10평 이내에 別棟으로 해야 하던 것을 지하층 또는 別棟이든 무방함

② 다락방 제외…박공형 住宅의 다락방(방바닥에서 높이 1.8m이하의 경우에 한함)은 건축물 연면적에서 제외함.

③ 最少佔地面積 27평으로 축소…종래 住宅의 개축 및 재축은 반드시 대지면적이 40평 이상 되어야만 개축 허가되었었으나 앞으로는 27평 이상이면 개축 및 재축의 허가 가능. 이는 일반지역의 최소대지면적이 27평이기 때문에 이에 맞춘것임.

④ 位置变更許容…종래는 건축물의 개축시 位置 및 方向의 변경이 불가했으나 앞으로는 동일대지안에서는 개

축시 방향·위치변경을 허용.

#### ▲農畜產施設

① 5평 이내는 허가없이 건축 허용…5평이내의 畜舍는 1회에 한하여 허가없이 건축 허용. 종래에는 단 1평의 축사도 허가를 요했음.

② 150평까지 허용…畜舍 건축허용규모가 일률적으로 90평인데 나한자촌의 축사는 가구당 150평까지 건축할 수 있도록 허용

③ 감귤 창고 건축…감귤農場內에서 종전에 창고를 불허하던 것을 해제, 농장울타리내에는 감귤창고를 짓도록 함.

이는 감귤이 운반과정에서 훼손이 많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한것.

④ 煙草施設…호남, 충남지방에서 많이 재배하는 연소건조시설을 위한 비닐하우스 허용

▲産業施設…工場의 用途變更許容…그린벨트 지정 이전에 건축한 공장은 용도변경이 안되었으나 앞으로는 기계·동력시설의 변동없이 종전과 동일한 원료를 사용하여 유사한 제품을 생산하는 업종에 대해서 용도 변경이 가능.

▲共同施設…揚水場 설치. 종전에 금지되었던 부락 공동 양수장도 5평이내에서 설치 허용.

#### ▲鉱業施設

① 銀鉱開発許容…현재 金·石炭·鐵·銅·重石·鉛·亞鉛·滑石·玉石·水晶·蛇紋岩만 개발할 수 있는 것을 연간 1,000kg이상의 생산규모로 5년이상 가동할 수 있는 銀鉱開発을 허용.

② 蟻石開発許容…연간 6,000톤이상이 생산규모로 5년 이상 가동할 수 있는 蟻石鉱 개발 허용.

#### ▲公共施設

① 火葬場 설치…釜山등지에 火葬場 설치를 허용.

② 邑面事務所 증축…邑面등 사무소가 현재 전혀 증축이 안되고 있는데 이를 허용.

③ 農協施設허용…郡의 신설에 따른 郡단위 庁舍 및 農協施設의 설치 허용.

#### ▲기타

① 벽돌공장등 간이시설 허용…취락지구개선사업에 필요한 블록·시멘트·벽돌·레미콘 및 아스콘등의 임시생산시설 허용.

② 養老院등 편의시설…기존 養老院·孤兒院의 경우 울타리 내에서만 식당·운동장등의 편의시설 증축 허용.

### 建築資材生産実績調査 연장—건설부

업체들 호응 낮아 12월말까지

12월 8일 전설부에 의하면 住宅資料需給計画립과 品質向上 및 開發促進을 위해 11월 한달동안 실시한 資料生産實態調査는 총대상 502社중 자진해서 조사에 응한 업체가 180社에 불과 12월말까지 연장키로 했다.

住宅垈地 20~50평, 전체의 23%

1인당 住居面積 2.91평—경제기획원 조사

우리나라에는 垈地 30~50평에 建築面積 10~20평의 주택이 가장 많은 것으로 밝혀졌다. 또 1인당 바닥면적은 2.91평이며, 都市지역이 2.36평인데 비해, 農村 지역은 3.5평으로 都市住宅難이 심각하다.

經濟企劃院이 전국 13,593가구를 대상으로 住宅 및 環境実態를 표본조사한 바에 의하면 垈地는 30~50평 규모가 23.9%로 가장 많고, 30평 미만도 22.5%에 이르고 있다.

바닥면적은 10~20평이 47%로 가장 많고, 20~30평은 28.5%, 10평 미만은 10.3%이다.

희망하는 住宅型은 单独住宅이 전체의 92.5%로 압도적이고, 아파트는 6.5%, 연립주택은 0.8%에 불과하다.

아파트를 희망하는 경우는 地方보다 都市가 또 교육정도가 높을수록 아파트희망율도 커지고 있다.

单独住宅을 희망하는 경우는 無學의 경우 전체의 96.5%, 国卒 94.5%, 中卒 92.3%, 高卒 88.6% 大卒 87.5%이다.

한편 주관적 公害感에 관한 조사결과에 의하면 자기가 살고 있는 집주변에 公害가 있다고 느낀 사람이 29.5%에 이르고, 지역별로는 都市가 37.7%, 農村 19.8%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公害의 내용으로 보면 都市의 경우(팔호안은 農村) 먼지가 42.3%(42.8%), 騷音 31.1%(30.7%), 媒煙 13.8%(2.6%), 惡臭 12.9%(17.8%)인 것으로 밝혀졌다.

### 아파트瑕疵 시비 시정키 위해

共同住宅管理規則 年内 시행—건설부

12월10일 건설부에 의하면 그간 共同住宅의 施工 瑕疵 및 施設老朽와 고장을 둘러싼 시비를 시정하기 위하여 共同住宅管理에 관한 規則을 체정키로 했는데 국무 회의에서 이 規則案이 통과됨으로써 이 규칙은 곧 공포하여 年内에 시행한다. 이 규칙에는 아파트등 共同住宅管理를 위해 施工業者는 일정액의 瑕疵補修保証金을 적립해야 하는 한편, 入住者는 特別修繕充当金을 적립하는 등, 시공 업자와 입주자에게 双務義務條項을 규정하고 있다.

### 竣工未畢建築物 5万棟 구제

80年中 市·郡에 審議委설치

정부는 80년에 약 5만棟의 竣工未畢 建築物들을 구제해 주기 위해 各市道에 대상 건축물의 정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할 竣工未畢既存建築物審議委員會를 설치키로 했다.

12월 11일 건설부에 의하면, 이 심의위원회는 구제해

줄 대상건축물을 심사하고, 인근 利害關係者들로부터 재산상의 피해 유무에 관한 의견을 들어, 피해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그 피해액을 사정, 그 사정액을 구제대상 건축주로 하여금 배상토록 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건설부는 이와함께 救濟對象建築物을 50평이하의 住居用建築物로 제한하고, 50평 이하의 住居用 建築物이라도 再開發地域·接道区域·開發制限区域(그린벨트) 내의 건축물을 제외시키기로 했다.

건설부는 80년 1월부터 3월까지 대상건물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3개월간의 심사를 거쳐 6월 1일자로 구제해줄 방침이다.

### 우리나라人口 347百35万명—10월 1일 현재

서울은 811万, 全人口의 21.7%

離農따라 全北·全南·忠北·江原은 줄어

12월11일 경제기획원에 집계된 常住人口조사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 常住人口는 10월 1일 현재 3천 7백35만 5천명으로 1년전보다 1.98%인 72만 7천명이 늘어났다.

地域別로는 都市人口가 전체의 55%로 78년의 53.1%보다 높아져 農촌인구가 계속 도시로 옮겨오고 있으며, 특히 서울의 주변도시의 인구가 급증하고 있다는 것으로 집계됐다. 京畿道 富川의 경우 人口增加率이 19.7%로 전국에서 가장 급증하였고, 安養이 15.6%, 仁川이 11.5%, 水原이 9.1%로 높은 증가율을 보인 반면 서울人口는 3.7%증가에 그쳤다.

그러나 서울人口는 금년에 8백만을 돌파한 8백11만 4천명(全人口의 21.7%)을 기록, 작년의 7백82만 3천명에서 29만 1천이 더 증가했다.

서울人口增加에 의해 서울주변도시의 인구증가율이 매우 높은 것은, 서울인구증가방지대책이 「周邊 都市의 肥大」현상을 빚고 있는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한편 市道別로는 京畿道가 6.2%로 가장 높은 인구 증가율을 보인 반면, 계속되는 離農現象에 따라 全北·全南·忠北·江原地方의 人口는 오히려 減少現象을 나타냈다.

### 農村工場, 綠地에도 건축 가능하게

허가절차 등 대폭 간소화—정부추진

12월13일 관계당국에 의하면, 農촌지역에 개별 공장을 적극 유치하기 위해 읍면의 도시계획구역내 綠地 地域에도 工場을 허용하는 등 공장설치허가를 대폭 가소화하기로 하고 있다.

관계부처가 마련한 경제장관회의에 회부한 「個別 工場설치허가 간소화 방안」에 따르면 ① 허가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대폭 위임하고, ② 개별공장의 입지확보와 農촌지역의 공업화를 위한 土地利用計劃을 재조정하며, ③ 郡道開發計劃수립때에 農촌공장의 교통편의를 우선적으

로 고려하고, ④ 전기 및 전화 우선 가설, 중소기업자금 지원 등 각종 혜택을 부여하도록 되어 있다.

정부의 이같은 조치는 오는 90년까지 1개면에 2~3개의 農村工場을 유치토록 되어 있으나 工場을 설치하는 경우 15종의 민원서류를 89개 유관기관에서 취급하고 있을뿐 아니라 허가업무의 93%를 중앙관서가 관장하고 있어 허가절차가 지나치게 복잡하고 법정처리기간만 392일이 소요되기 때문에 農村工場誘致에 큰 지장을 주고 있기 때문이다.

#### 海外建設受注 67億달러

年末까지, 修正目標比 13億달러 미달

12월13일 海外建設協会에 따르면, 주요 건설시장인 이란의 정변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해외건설수주업적은 지난 11월말 현재 59.3億달러를 작성, 연말까지는 계약고가 67億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당초 목표인 60億달러에 비하면 7億달러가 초과한 것이나 修正目標인 80億달러에 비하면 13億달러가 미달된 것이다.

특히 현재 각종 입찰에서 우리나라 業체들이 계약을 추진중인 海外建設規模가 모두 30億 달러에 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당분간 海外建設工事 受住 展望은 밝은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80년 海外建設受注展望은 미국—이란사태등의 관계등, 中東地域 情勢變化에 따라 큰 영향을 받게 돼 매우 불투명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 取得税·登録税·実去來額 基準으로 과세

80年부터, 地方税法 改正에 따라

12월14일 내무부에 의하면, 改正地方税法은 취득세와 등록세의 과세표준이 종전 不動產時価標準額에서 앞으로는 개인간의 실거래 가격으로 바뀌게 되어 時価標準額과 実去來额의 차이만큼 세금부담이 늘어나게 되었다.

取得税·登録税의 実額課稅制 도입은 ① 과세 평형 원칙을 기하고, ② 국세청에서 양도소득세 계산때, 운용중인 조사기준가액에 지방세 과세표준도 같은 수준으로 조정하는 동시에, ③ 현재 아파트入住者の 경우에만 취득세·등록세가 실액 과세되고 있는 불평을 없애며, ④ 지방재정 확보, ⑤ 실거래가격과 시가표준액의 차이가 큰데서 오는 불만등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따라 80년부터 취득세 및 등록세는 개인간 거래에도 매매계약서 또는 기타 증서에 의해서 세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 牙山湾일대 3億坪, 産業基地로 지정

重化学工業·背後都市 건설—건설부

정부는 牙山湾일대의 본격개발에 착수 12월 14일 경기도 평택군 포승면 등 이 일대의 3億坪을 産業基地開発地区로 지정하고 개발기본계획을 확정했다. 산업기지 개발지구로 지정된 지역은 華城郡·平沢郡, 忠南 唐津郡·牙山郡의 일부 및 인접 해변지역이다.

産業基地開発地区는 대단위 산업기지개발과 이에 따른 港湾·用水·道路의 지원시설 및 背後都市의 건설을 계획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지정하는 것으로 이地区로 지정되면 지구안에서는 道路法·河川法·建築法 등 개별법이 규정한 認許可를 받지 않고 공사를 수행할 수 있으며, 지구내에서는 지정목적에 위배된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牙山工业基地開発基本計劃에 따르면 포승면 일대는 鉄鋼 및 聯閥產業을 유치하고, 華城郡 八灘面等 都市 地域과 인접한 内陸地域은 首都圈內 移転工場을 유치하여 바다에 인접한 지역은 石油精製·石油化學·非鐵屬金·機械 등 기간산업의 大單位 工業團地를 개발하도록 돼 있다.

#### 賃貸家屋 入住者 保護法, 国会통과 안돼

내년 臨時国会에 再上程計劃—건설부

12월18일 관계당국에 의하면, 전세·월세 등 주택의 임대차 관계에서 債借人을 보호하기 위하여 유정회 서민주택특별위원회가 제안했던 賃貸家屋 入住者 保護 法案이 정기국회에서 보류, 당초 80년 1월1일부터 시행키로 했던 계획이 무기연기되게 되었다.

한편 건설부는 당초 의원입법키로 한 賃貸家屋 入住者 保護法案을 政府案으로 국회에 다시 상정키로 하고 내년 초 임시 국회까지 이를 마무리지울 방침이다.

#### 慶州, 世界 10大遺蹟地로

UNESCO 서 선정, 연구단 구성

신라의 고도 慶州가 지난 12월12일~15일 泰国「파사누로크」에서 열린 아시아地域 10大遺蹟地 選定 國際專門家會議에서 日本의 京都, 파키스탄의 이슬라마바드, 泰国의 스코타이, 北韓의 平壤등과 경합끝에 世界10大遺蹟地로 선정되었다.

유네스코本部는 이번 국제회의 결과에 따라 慶州를 세계 10대 역사적 유적도시의 하나로 공식 지정하여 앞으로 10년간 國際學術會議와 國際專門家들로 研究團을 구성, 본격적인 조사연구 및 발굴사업을 전개하며, 그 결과를 보고서로 작성, 전세계에 소개할 계획이다.

#### 輸入原木에 害虫 70여종 발견

건물·산림에 큰 피해—高大昆蟲問題研究所

해외에서 수입하는 原木속에 각종 해충이 묻어 들어와

검역 및 방역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12월 20일, 高大害虫問題研究所(尹一炳교수)가 지난 7월부터 4개월간 仁川·木浦등 하역장을 중심으로 조사한 「輸入原木의 害虫調査」에 의하면 해충이 유입되는 원목은 인도네시아·부르네이등 동남아시아 지역산인 라왕과 미국·칠레 등 아메리카지역산인 美松 등 40여종이며 이에 묻어 들어온 害虫류는 나무좀류·코벌레·흰개미류 등 모두 70여종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해충은 輸入原木에 구멍을 뚫거나 이를 재료로 한 가구를 씹먹으며, 흰개미류는 건물의 기둥을 비롯한 목

질부를 파먹어 붕괴시킬 수 있다.

또 국내의 자생적 해충은 생태적으로 천적이 생겨 번식이 억제되고 있으나 솔잎흑파리, 흰불나방 등 유입된 해충류는 미처 천적이 생길 틈없이 번식해 산림에까지 큰 피해를 줄 수 있다고 한다.

이 대책으로 지금까지의 수입원목을 바닷물에 담그거나 살충제를 뿌리는 등 형식적인 검역방식을 벗어나 원산지 벌채단계에서부터 국내 항구에 이르기까지 철저한 방제와 검역을 해야 한다고 한다.

## 11월 定期国会에서 통과된 法律

(글  
자)

●竣工未畢既存建築物整理에 관한 特別措置法 : 50평미만의 주거용 건축물로서 건축당시 허가를 받고 건축하였으나 建蔽率·容積率·높이 제한을 초과하거나 인접건물과의 유지거리 위반등으로 준공필증을 받지 못한 건축물을 구제.

●建設業法(改) : 자기공사의 시공범위를 일반건축물인 경우, 1,155m<sup>2</sup>에서 661m<sup>2</sup>로, 특수건축물인 경우 825m<sup>2</sup>에서 495m<sup>2</sup>로 하향조정.

●建築法(改) : 바닥면적의 합계가 30m<sup>2</sup>이내의 증축·개축·재축 또는 매수선은 申告制로 변경, 부실공사의 방지를 위해 공사감리자는 그 보조자를 현장에 상주시켜도록 의무화.

●建築士法(改) : 건축사가 관계분야의 기술자를 확보하여 綜合建築事務所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공동주택등의 공사감리는 綜合建築士事務所로 등록한자만이 할 수 있도록 제한.

●住宅建設促進法(改) : 韓國土地開發公社를 사업주최로 추가, 준공검사·준공검사때 부대시설도 검사, 재개발지구안의 주민 또는 직장에 고용된 근로자가 조합을 구

성하여 주택을 건축하는 경우 필요한 지원을 함.

●特定地域綜合開發促進에 관한 特別措置法 : 특정지역을 개발촉진지구, 개발예정지구 및 개발규제지구로 지정하며, 특히 개발촉진지구를 집중개발하기 위해 사업시행자에게 土地收用權과 금융지원.

●土地区劃整理事業法(改) : 產業基地開發公社과 土地開發公社도 구획정리사업 시행자로 추가하고, 行政府 이외의 시행자도 증·감 환지를 지정하거나 立体換地를 할 수 있도록 함.

●消方法(改) : 일반주택과 영세업소에 대한 난방용 유류취급규제를 완화, 消防安全協會 설립.

●都市公園法 : 시장·군수가 아닌자도 허가를 받아 도시공원의 설치·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도시 공원에 설치할 공원시설의 종류를 규정.

●公園法(改) : 郡立공원을 신설하고 공원구역 안에서 공원을 점용, 사용하는자 등은 당해 구역의 청소를 하도록 함.

●測量法(改) : 기본측량 이외의 측량을 하고자하는자는 地理院長의 승인을 얻어야 함.